## "감기랑 비슷한데…돈 들여 코로나 검사 받아야 하나요"

독감·코로나 신속항원검사 최대 10만원 부담에 검사 기피 늘어 의료계 "코로나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돼 확산 우려…대책 필요"

"감기와 증상이 비슷한 데 굳이 돈 들여가며 코로 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광주·전남에서 독감 및 코로나 의심증상을 보이 는 환자들이 신속항원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가 지난달 31일부터 코로나19를 감염병 위험 도 4급으로 내림에 따라 검사 진료비 지원체계가 바 뀌면서 환자가 검사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가 2급 질병이었던 지난달까지는 진찰비 5000원이면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현 재는 일반국민들은 검사비 전액 (3~5만원)을 본인 이 부담해야 한다.

실제 신속항원검사비는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

독감, 코로나 두 항목에 대해 신속항원검사를 하 게 되면 환자는 최대 10만원까지 지출해야 한다.

지난 8월 말께 B형 독감에 걸렸던 조영희(여·62 ·나주시 다시면)씨는 자고 일어났더니 온몸이 무기 력해지고 체온이 39.3도까지 치솟았다.

늦은 시간 나주시 소재의 종합병원에 방문한 조 씨는 의료진으로부터 독감과 코로나 여부를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두 검사를 모두 했고 8 만 3000원 가량의 진료비를 내야했다.

조씨는 "몸이 아프고 정신이 없어서 해야한다는 검사를 일단 다 하기는 했는데 영수증을 보고 기겁 했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의료진은 정확한 병명 진단 및 치료를 위 해 고열 또는 호흡기 이상 증세를 보이는 환자에게 코로나와 독감 신속항원검사 두 가지를 모두 권장

하지만 코로나 감염병 위험도 격하조치로 의료진 이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를 권유해도 환자들이 거부 하고 있다.

김상훈 광주병원 내과 원장은 "과거 무료로 검사 했던 때보다 환자들이 독감, 코로나 등 신속항원검 사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정섭 광주시의사회 수석부회장 역시 "최근 독 감 증세를 보이는 환자 10여명이 병원을 방문하면 그 중 3명 정도만 신속항원검사를 한다"며 "그마저 도 회사에 서류를 제출해야 해야 하는 직장인들만

울며 겨자먹기로 검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서는 코로나 19임에도 검사를 하지 않 아 자칫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별 전체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돼 자칫 가을 과 겨울 코로나19 유행 대응에 큰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60세 이상 또는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당뇨, 고혈압 등)와 면역 저하자는 PCR검사를 지 원받을 수 있고,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진료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지진 났을 땐 이렇게

13일 광주시 북구 태봉어린이집에서 북구청 안전총괄과 재난안전팀 직원들과 아이들이 지진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에 英 다큐 '푸틴의 국내 전쟁'

11월 8일 서울서 시상식

5·18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린 독일 언론인 고 (故) '위르겐 힌츠페터(1937-2016)'를 기리기 위 한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수상작이 선정됐다

2023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심사위원회는 최우수 작인 '기로에 선 세계상' 수상작으로 영국에 거주하 는 게스빈 모하마드 등 4명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인사이드 러시아:푸틴의 국내 전쟁'을 선정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 내부를

들여다보는 다큐멘터리로, 푸틴정권 비판여론, 우 크라이나 전쟁 반대운동, 전쟁정보의 투명한 공개 와 언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다양한 현장 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뉴스 부문은 2022년 8월 가장 위험한 전장이었 던 우크라이나 동남부에 위치한 바흐무트를 취재한 미국 출신 벤자민 솔로몬 등 3명의 '바흐무트 전투' 가 선정됐다.

특집 부문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내 러시아 바그 너 그룹의 폭력·학대를 취재해 여론 조작의 위험성

을 드러낸 프랑스의 캐롤 발라드, 클레망 디 로마 2 명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내 러시아의 소프트파 워'가 선정됐다.

비경쟁부문 공로상인 오월광주상은 구 소련의 볼 로디미르 쉐브첸코 등 4명이 지난 1986년 취재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로 낙점됐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8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 에서 열릴 예정이며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상금 1만 달러와 트로피를 수여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일 정부, 위안부·강제동원 공식 사과했다"

정부, 유엔에 의견서 논란…한국 NGO 단체 "일 정부 대변" 비판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일본 정부가 위안 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를 했다' 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

'54차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 NGO 대표단'이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파비안 살비올 리(Fabian Salviol) 유엔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이날 제54 차 유엔 인권이사회 세션에서 대한민국 방문조사 보고서를 공식 발표했다.

이 발표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의견 서가 공개됐다. 의견서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 부' 피해자들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공 식 사과를 하고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는 내용이

한국 NGO 대표단은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 게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고, 반인도적 범죄를 자 행한 사실도 부인하고 있다"며 "정부가 일본정부 를 대변하는 취지의 답변을 제출한 것은 부적절 한 답변이자,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다시 한번 짓밟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에게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국가폭력 트 라우마치유센터 예산과 '위안부' 및 '강제동원' 관련 과거사 대응 예산을 삭감했다"며 "정부는 이 같은 과거사 관련 정책의 역행을 파비안 살리올 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표단은 13일과 14일 유엔 사이드 이벤트 및 제54차 유엔인권이사회 시민사회 구두발언 등을 통해 정부 의견서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한국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국제 인권 기준에 따 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6월 한국 방문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를 만났고, 광주시 5·18정책연구 TF팀, 5·18기념 재단과 면담을 진행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광산우체국 '반송불능 우편물' 경매 가보니

## '샤넬'백 아닌 '샤헬'백이었네

가품 'CHAHEL' 낙찰…우편물 1년 보관·매각 불발 땐 폐기

"'혹시 명품백 '샤넬' (CHANEL) 아닐까?" 13일 광산우체국 4층 우편지원실에서 열린 '반송불능 우편물' 경매에 눈길이 쏠렸다.

매각물품은 핸드백이었다. 홈페이지 경매공 고 사진에는 명품브랜드인 '샤넬'의 로고가 확 연히 보였다.

우체국은 경매 안내에서 '새상품', '진품증 명서 없음', '재질:인조가죽' 등을 제시했다. 낙찰자가 확인한 결과 이 핸드백 덮개 부분 에 '샤헬'(CHAHEL)이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이른바 가품이었다. 이번 경매는 올해 두번째다.

첫번째 매각 물품이었던 중고 핸드폰은 결국 매각되지 않아 지원순환센터에 보내 폐기됐다. 이날 경매가 진행된 반송불능 우편물은 수취

인과 발송인의 주소나 성명이 불분명해 되돌려 보낼 수 없는 우편물을 말한다.

우체국은 우편법에 따라 이를 개봉해 일정기 간 보관하고 이를 공매 등의 절차를 통해 처분 하고 있다.

1년이 지나면 우체국은 매각 공고를 한 뒤 처분을 하게 되고 발생한 수익은 국고에 환급 된다. 만약 물건이 매각되지 않으면 즉시 폐기 하게 된다. /장윤영 기자 zzang@



